

# 금투세 보완 후 시행되나… 공개토론회 예고에 ‘관심 집중’

민주당, 오는 24일 찬반 토론회  
이재명, ‘보완 후 시행’ 입장 선회  
6개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 등 준비  
개인 투자자, 민주당에 비판 목소리

내년 초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유예 및 보완 여부를 앞두고 당내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를 놓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정치권과 증권가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의 유예 및 완화 문제와 관련해 찬반 입장을 가진 국회의원 2~3명씩 팀을 나눠 공개 토론회를 갖는다. 현재 금투세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워낙 큰 상황이라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토론회 결과에 따라 금투세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형식상 토론일 뿐 사실상 ‘보완 후 시행’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후보 당시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최근 보완 후 시행 방안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당내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시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기재위·정무위에서도 다수의 의원이 금투세를



한국주식투자자연합을 비롯한 12개 투자자 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광현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위원장은 총 6개 법안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는 현행 연 5000만원인 금투세 기본공제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원천징수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연 납입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당론이 아닌 개인 법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금투세를 보완 후 시행하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과 유사한 만큼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금투세를 보완해 시행하는 방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에 의지를 보이는 민주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국내 주식의 경우, 부자 감세 방지를 위해 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금투세를 강행하면서도 ISA 계좌로 해외주식을 사면 아무리 많은 이익

을 내도 비과세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 임의권 법안은 금투세를 강행하기 위한 위험한 꼼수 법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수많은 반대 여론에도 귀를 막고 금투세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이른바 사모펀드 특혜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 이후 총 640조원 규모 사모펀드 중 주식 사모펀드를 제외한 619조원의 사모펀드 가입자가 해당 펀드의 수익분배를 받지 않고 환매 후 청산하면 기존 세율 49.5%가 27.5%로 된다. 개인투자자의 끊임없는 사모펀드 특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사모펀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킬레스건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들의 세율이 49.5%에서 27.5%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며 “사모펀드의 분배금은 여전히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49.5%의 세율이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선 사모펀드 투자자 비율을 보면 97%가 연금금 같은 기관이고 개인은 3%에 불과하다”며 “즉 97%의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금투세 도입 시 사모펀드 운용자산에 따라 세부담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왕현정 KB증권 TAX솔루션부장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고액 투자자 중에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유리해지는 투자자도 있지만 불리해지는 투자자도 있다”며 “투자 유형이나 비율 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모펀드에 국내 주식이 포함돼 있으면, 현재 비과세 상태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가 이뤄질 수 있는 반면 해외주식, 채권, 부동산, 과생상품 등에 투자한 경우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세 10%까지 감안하면 대략 50%까지 육박하는데 금투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 세율이 27.5%로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투세가 유예되지 않고 예정된 대로 내년에 시행된다면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은 세법의 복잡성과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왕현정 부장은 “투자자는 자신의 자산을 점검하고, 금투세 도입 시 세금 절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텍스 플랫폼 등으로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해 가장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금감원, 금융업계 ‘5대 경제대국’ 인도 진출 지원사격

‘금융회사 인도 진출 설명회’ 진행  
인도 금융 인허가 제도·전망 등 소개  
시장 잠재력·높은 경제성장률에 ‘관심’

‘세계 최대 인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5대 경제 대국으로 거듭난 인도 시장에 대한 국내 금융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 금융업계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금융회사 인도 진출 설명회’를 통해, 인도 금융당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현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한 인도대사관·금융협회와 함께 ‘금융회사 인도 진출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도 재무부, 중앙은행이 참석해 인도의 금융 인허가 제도와 투자 환경 전망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인도 진출에 관심이 많은 국내



금융감독원은 주한 인도대사관과 ‘금융회사 인도 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관 대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금융감독원

금융사와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설명회에는 국내 50여개 금융회사에서 140여명이 참석해 인도 진출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에 대한 금융업계의 관심은 인도 시장의 잠재력과 높은 경제성장에서 비

롯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가 2~3년 내에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일본과 독일을 제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인도가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인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은 8.2%로 주요 경제 국가 중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는 12개 국내 금융사가 25개 현지 점포를 인도에서 운영 중이다. 금감원 측은 “이달 기준으로 다수의 국내 금융사가 11건의 신규 또는 추가 인도 진출을 계획 중”이라고 언급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현지에서 가장 많은 지점(6개)을 운영 중이다.

이날 인도 금융당국은 인도의 금융제도와 현황을 발표했다. 인도 재무부는 인도 금융산업 현황과 인허가 제도 전반을, 인도 중앙은행은 은행 인허가 승인 절차와 감독체계를 소개했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FPI) 관련 세부 등록 절차 및 규제를 안내했다. 특히 인도 국립투자인프

라펀드(NIIF)의 라지브 다르 CIO는 “국가 정책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인도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특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피력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국내 금융사들은 그간 정보 취득에 제약이 있던 인도 금융산업·규제를 문의하고, 인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질문으로는 ▲금융업 진출 요건 ▲세금 문제 ▲인도 금융시장 및 기업실적의 신뢰성 있는 정보 수집 방법 등이 나왔다. 금감원은 인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국내 금융사의 성공적인 인도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인도의 풍부한 자원과 인력이 한국의 경쟁력 있는 금융 서비스와 결합된다면 양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시너지를 통해 실물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금융시장의 균형 있고 견고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낮아… “매수 포지션 우세”

BOJ 금리인상 전망에 국제 입찰 개선  
美·日 선거에 통화정책 불확실성 상존

당분간 지난 8월 ‘블랙먼데이’에 불과했던 것과 같이 대규모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날 가능성은 다소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8일 강효주 KB증권 연구원은 리포트를 통해 “지난달에는 엔 캐리 이슈 발생 직전에는 5개월 연속 10만 계약이 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엔화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이 형성돼 있었고, 심지어 7월 말에는 그 규모가 15만 계약을 상회하는 정도였다”며 “8월을 거치면서 숏(매도) 포지션이 일정부분 해소되면서 현재는 롱(매수) 포지션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전망에 부진했던 일본 장기채 입찰도 개선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지난 5

일 진행됐던 30년물 일본 국채 입찰에서 입찰금리는 직전의 2.23%에서 2.043%로 낮아졌고, 3일 진행된 10년물 입찰도 2개월 연속 0.9%대를 유지하면서 7월 주요 부진 우려가 확대되던 당시보다 낮아졌다”며 “BOJ의 추가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엔화의 가파른 강세 전환 가능성은 8월 대비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일본 증시는 이달 첫째주 미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 엔비디아 반등점 위반

소환장 발부 이슈가 불거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2일 다키이 225지수는 전 장보다 5.8% 떨어지며 아시아 증시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그는 “우에다 BOJ 총재가 경제·물가 전망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엔·달러 환율까지 강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며 “6일 12시 기준 엔·달러 환율은 143엔대까지 하락하면서 가파른 엔고 전환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재차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 증시 펀더멘털을 훼손시킬 수 있는 엔화 수준에 근접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강 연구원은 “수출 기업들의 하반기 상정 환율인 142.56엔보다도 절상될 경우, 수출 기업 위주로 일본 증시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특히 9월에는 미국 금리 인하 뿐 아니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로 인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환 민감도가 낮은 섹터로 선택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godhe@